

“박대통령 내달초까지 반드시 대면조사…곧 일정 조율”

이재용 못넘은 특검 “수사 흔들림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애초 수사 일정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 수사의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

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에 췌기를 박은 것이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달 말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차 겨냥 세갈래 수사 진행

김기춘·조윤선 영장 오늘 심리

김영재 조만간 영장 청구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뇌물죄와 관련한 삼성을 첫 타격으로 삼고 한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

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법리 적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몸통’에 해당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특검은 청와대 비선 진료 수사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성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병원 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들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가장 긴 하루 보내고...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와 종이백을 직원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법이 정의 외면하고 재벌권력 앞에 굴복”

야권 대선주자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일제히 비판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19일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

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

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적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실망스럽다. ‘유전부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썼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승철 “靑 지시 없었다면 미르·K재단 설립 안됐을 것”

안 前수석 등 공판 증인 출석 “안중범 지시로 재단 만들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일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이 설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 기소)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전경련 회원사가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고 물음에 대해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이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어쨌든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안 전 수석에게서 들은 얘기들을 고소란히 진술했다. 안 전 수석에게서 재단 설립 지시를 받은 뒤 설립 목적을 묻자 “한류 문화 확산과 문화계 우파 단체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그는 또 안 전 수석이 “문화 쪽 우파 단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문화계엔 좌파 인사가 많고 체육에는 문제 있는

인사가 많아서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안 된다. 재단을 설립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냐”고 묻자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한편 최순실씨 측은 재판에서 “전경련 회원사가 연간 사회에 환원하는 총 1조원에 비하면 공익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은 많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또 한류가 확대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회원사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각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모금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연합뉴스

정호성 “세월호 당일 정오 넘어서 사태 심각성 알았다”

현재 탄핵심판 7차 변론 “대통령도 대포폰 썼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점심 때까지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참사 당일 오전 세월호 사고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12시에서 12시반 사이에 점심을 주로 먹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안부를 안행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안전을 중시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도 다 구조하는구나’라는 대화

를 하면서 흥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11시2분께 전원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파악한 후 1시간이 넘도록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사태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 전 부속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시 망설인 뒤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 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는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현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 /연합뉴스

해남군

생각만이 청정 땅끝해남을 선물하세요!

명품 선물세트 1호 45,000원
여주차, 함초소금, 돌자반, 볶음깨, 오색발이현미, 땅콩햇쌀, 단감

명품 선물세트 2호 70,000원
지주식돌김, 단감, 참기름, 세밀, 한눈에 반한 쌀, 잡곡(수수)

해남군 직영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061-537-1472 (일사천리) 080-859-1100 (무료전화)

www.hnmiso.com / www.해남미소.한국